

“코로나19로 생긴 상황 향후 기반 다질 기회로”

도의회 교육위, 온라인 강의 방안 마련·수험생 상담 창구 개설 등 제안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28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 제2차회의를 가졌다.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기금운용의 방향성과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 변화사안 등에 대해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특히, 교육위 의원들은 “코로나 19로 생긴 다양한 변화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상황이 향후에 있을 상황의 든든한 기반을 가질 기회가 되도록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현재까지 코딩교육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수요 충족에 시간이 걸려 다수의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온라인 개학과 같은 상황일 때 코딩 전문가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도내 아이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박희자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많은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소중함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이런

소중함이 개학 후에도 지속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호흡기로 감염되는 코로나 19로 학생들이 깨끗한 공기에서 학습할 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온라인 개학으로 아이들이 없는 학교에 공기정화를 위한 실내 식물을 설치하는 사업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식 의원(전주8)은 “이런 시점에서 교육감의 고3 교육 과정의 수능 범위를 제안하는 제안은 온라인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의 불안함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수험생들을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담창구를 개설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식 의원(군산8)은 “특수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평소 부득이하게 결석 상황에 놓인 특수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체계가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도교육청도 현재 상황에 맞는 고통을 함께 분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금적립으로 편성한 금액 중 최대한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학생들의 학습지원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방과 후 교사의 생존권을 보장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

진형석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도교육청의 성인지예산을 보면, 교육부 지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교육부 정책에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보완적인 사업을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위원장(익산4)은 “도교육청의 국외연수 예산을 보면 삭감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삭감 여부가 다르다”며 “지역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이런 사업을 정확하게 찾고 예산을 줄여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학교의 경우에는 학습 방향이 조금 달라야 한다”며 “예체능 수업이 진행되는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복지 증진

나인권 도의원, '임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대표 발의
시설 개선·관리비 절감·임주자 경제역량 강화 등 근거 마련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저소득층과 주거약자의 입주 비율이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 재정이나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조례안은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 사업 등 시설개선사업과 임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주자의 관리비 절감, 경제역량 강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아동의 건전 성장 등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28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오는 5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취약하고 소외된 주민들이 대부분이지만, 건물이 오래되어 시설이 고장 나고 고치기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사업이 지원되어 임주자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장·광역-기초정부간 합리적인 복지역할 분담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복지대타협(안) 수용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광역·기초 정부 간 합리적인 복지역할분담을 위한 복지대타협(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반인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50% 지원 근거 마련

나기학 도의원, 지원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림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93개에 이르는 섬이 있는데, 풍부한 도서자원과 도서지역 내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바다낚시, 휴양 등을 즐길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민과 타 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나 의원은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도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민은 물론이고 타 시·도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수혜대상을 전라북도민으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타 시·도민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와 협의해 여객선 운임 지원금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환수 및 부정승선 방지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나기학 의원은 “이미 광역자치단체나 시군에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어 전라북도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도내 도서지역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지역 관광활성화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8일 제 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진성 기자

민생 유성엽 의원, 코로나
감세 확대 관련 법안 발의



국회 유성엽 의원(민생당, 정읍·고창)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및 간이과세자가 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의 기준금액을 각각 추가 상향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장기화됨으로써 경제활동 위축과 실물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현행 세제지원 제도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달 17일 여야 기재위 간사가 합의한 안보다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을 기준금액을 연 매출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가세 감면 대상은 약140만명, 납부면제 대상은 약30만명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심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0여만명이 더해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